

## 광장민주주의의 귀환, 87년 체제의 축제, 이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 금민 편집위원장

11월 26일 토요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참여했다. 건국 후 최대 규모라고 말한다. 1987년 6월항쟁으로 '87년 체제'를 탄생시켰던 광장민주주의가 귀환했다. 1987년과는 달리, 또한 백남기 농민의 죽음으로 끝난 1년 전 민중총궐기와도 달리,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는 철저히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살수차 없는 경찰, 행진로를 열어 주는 법원, 경찰차벽에 꽃무늬 스티커 붙이기, 시위대와 경찰의 포옹, 누구나 알 만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총집결한 문화행사 등이 집회의 평화적 성격을 유감없이 보여 준다. 그런데 사실 이 점은 경탄할 만한 일도 아니며 대단히 예외적인 일도 아니다. 국가권력의 입장에서도, 시위 대중의

입장에서도 박근혜 퇴진 집회는 평화적이지 않을 수 없다.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계엄령이 선포될지 모른다는 말이 나왔지만 집회에 참여한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집권 후 역사를 1987년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은밀한 쿠데타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지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은밀한 쿠데타의 핵심 주역들은 ‘국정 농단’ 세력으로 여론의 심판을 받았다. 그토록 은밀하게 쿠데타를 진행했던 이유가 계엄령과 같은 노골적인 쿠데타를 감행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보수 언론의 못매를 맞고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최저점에 도달한 권력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제1야당 대표의 말은 촛불집회에 1987년 6월항쟁과 같은 장엄한 서사의 분칠을 하려는 것일지 모르지만 시위 대중들은 이를 우스갯소리로 치부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99%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폭력 진압을 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폴리스 라인은 내자동 로터리와 같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박근혜 퇴진이라는 정치적 개념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촛불집회에 대해 국가권력이 설정한 폴리스 라인은 박근혜 퇴진이고, 권력을 누리던 새누리당과 권력을 획득하려는 야당들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겠지만 어떤 절차를 거치든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권력이 설정한 폴리스 라인이 박근혜의 퇴진까지라는 점이 여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 허용된 폴리스 라인은 박근혜 퇴진

박근혜 게이트는 『조선일보』의 폭로와 JTBC의 태블릿 PC 보도로 본격화되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로 이어지는 이 과정 전체가 보수 언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폭력과 비폭력의 프레임, 평화 시위와 시민 불복종의 프레임으로 사태를 바라보았다. 문화행사 하러 광화문에 모인 것은 아니라는 의식이다. 이러한 생각은 내자동 로터리, 차벽 넘기 등 행진 대열의 공간적 외연을 확장하려는 개별적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여기에는 사실 대단한 착각이 깔려 있다. 물리적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정치 공간으로서 퇴진 시위는 이미 청와대 경내까지 열려 있다. 보수 언론들이 등을 돌린 그 시점부터 이미 그랬다고 말할 수 있다. 보수 언론들이 설정한 폴리스 라인은 처음부터 박근혜 퇴진이었다는 말이다. 2선 후퇴니 거국중립내각이니, 또는 탄핵이나 하야냐 하는 논쟁은 박근혜가 권력에서 내려오는 방식에 대한 힘겨루기였을 뿐이고, 어떤 방식이든 권력 박탈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퇴진 시위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허용된 범위, 허용된 정치적 폴리스 라인 안에서의 시위는 평화적이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 퇴진이 허용 범위 안에 있는데 퇴진 시위를 폭력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그저 일탈이 될 뿐이다.

이 와중에 백남기 농민이 살수차에 생명을 잃은 1년 전 민중총궐기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2심 공판이 있었다. 1심

과 마찬가지로 8년형이 구형되었고 민주노총은 지난해와 올해의 민중총궐기는 목적, 구호, 주최단체도 같은데 “과렵치한 구형”이라고 항변했다. 물론 지난해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고 시위는 올해 처럼 ‘평화적’일 수 없었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가 부당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지난해에는 박근혜 퇴진이 허용된 폴리스 라인 안에 들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이 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퇴진을 제외하고 지난해 민중총궐기의 요구 사항들은 지금도 여전히 허용된 폴리스 라인 안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 87년 체제의 축제, 그 다음은?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로 광장민주주의가 귀환했다. 귀환은 87년 체제의 성대한 축제로서 이루어졌다. 역사를 1987년 이전으로 후퇴시키려는 은밀한 쿠데타는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광장과 축제는 1987년 전환의 불가역성을 표현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6월항쟁의 광장민주주의에는 군부독재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진압과 폭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난 2016년, 광장민주주의에는 두려움 대신에 ‘다양한 것의 통일’이 지배한다. 이 점은 2016년 광장민주주의의 대중을 근대정치의 고전적 의미에서의 대중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즉 매우 느리게 결집하지만 일단 결집하면 외적 작용에 대하여 단일한 반응을 보이며 단일한 운동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대중, 근대 물리학의 개념인 대중<sup>Mass</sup>이다.

1997년 이후의 신자유주의에 의하여 이와 같은 단일한 대중은 사회경제적으로 철저하게 해체되었지만 87년 체제는 자신의 고유한 한계 속에서 노무현 후보의 당선과 탄핵 정국의 광장민주주의, 이명박 집권 후의 촛불시위 등 광장민주주의를 통한 대중의 형성을 언제나 수반해 왔다. 87년 체제의 한계, 왜곡된 선거제도, 이에 따른 정당 체제의 미비, 직접민주주의적 제도의 미비는 광장민주주의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박정희 시대로 역사를 되돌리려는 은밀한 쿠데타가 폭로되었을 때, 광장민주주의는 당연히 사상 최대 규모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의 불가역성을 증명한 96%의 국론 통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통일이 이루어진 지점이 신자유주의 종식이 아니라 박근혜 퇴진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은 2016년 한국의 광장민주주의가 적어도 지금까지 진행된 양상에서 2008년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터져 나온 반긴축 시위와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준다. 간단하게 2011년 스페인의 ‘5월 15일 운동’과 비교해 보면, 5월 15일 운동이 국민당뿐만 아니라 스페인 사회노동당까지 모든 기성 정치를 정치카스트로 규정하고 반긴축과 기본소득 등 사회경제적 개혁을 요구했던 반면에 박근혜 퇴진 시위에는 야권의 참여가 두드러지며 대중의 요구도 오직 퇴진 또는 구속 요구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정세의 차이일 수도 있다. 예컨대 사회노동당 정부가 스페인의 기적이라 불렸던 신자유주의 정책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은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하더라

도, '5월 15일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부패 스캔들에는 국민당만이 아니라 사회노동당 인사가 더 많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정치 지형으로 보면 이 점은 굉장히 중요했다. 이 점은 국민당과 사회민주당, 나아가서 좌파연합도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5월 15일 운동'이 스스로를 인식하게 만들었고 몇 년 후 이 운동은 신생 정당 포데모스의 창당으로 이어졌다. 그러니 질문을 바꿔 보자. 퇴진 이후에도 광장민주주의가 가능할까? 퇴진 이후의 광장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의 피해 대중 99%를 하나의 공통성으로 묶을 수 있을까? 퇴진 이후에도 광장민주주의에 의해 신자유주의 종식을 목표로 하는 주체인 '대중'이 형성될 수 있을까?

국정 공백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진행 중

국정교과서 문제에서 교육부가 청와대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수 언론들도 빨리 퇴진하여 국정 공백이 없어져야 한다는 논조로 기사를 싣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의 이데올로기 사업이니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다른 정책들도 그럴까?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조사받고 있지만, 설령 뇌물죄로 기소된다고 해도 다른 정책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규제 완화 만능장치라고 할 만한 「규제프리존특별법」도 법사위에 올라갔다. 창조혁신센터와 관련된 펀드에 총 17개 기업이 참여하였는데, 투자

3,487억원, 용자 3,440억원, 보증 260억원으로 총 7,227억원에 이른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이처럼 협조한 재벌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는 것이지만, 박근혜-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 고리와 관련 없는 것이라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촛불대중이 퇴진만을 외치고 있을 때, 야당은 이 법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또는 퇴진 이후에 이 법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국정 공백 없이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신자유주의만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 뜨거워지고 있고,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다. 대기업 구조조정만이 문제가 아니라 풀뿌리 중소기업마저 감원이 시작되었다. 트럼프 당선으로 무역 환경은 더 어려워졌다. 퇴진 다음에 다가올 과제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기성 정치권은 개헌 논쟁으로 접어들 것이다. 개헌 논쟁은 박근혜 시대의 모든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로 환원하고 통치 구조의 문제만을 다룰 것이다. 이익을 분점하거나 또는 독점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 기성 정당들에게 개헌 논쟁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런 종류의 개헌 논의라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고 선거제도 개혁만 다루는 것이 더 낫다.

이러한 국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사실 분명하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고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퇴진 이후에도 광장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박근혜 퇴진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의 퇴진을 원한다면 사실은 지금부터 새로운 세상에 관해 말해야 한다. 가치나 지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적 체도를 통해 말해야 한다.

촛불집회라는 말을 총파업이라는 말로 바꾼다고 해서 퇴진 운동을 넘어서는 사회운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의 나라를 멈추기 위해서 총파업하자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말이다.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는 저녁이나 토요일에만 모여도 충분하다. 만약 나라를 멈추어야만 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나라가 멈춘 나라이며 신자유주의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질서이기 때문이다. **■ 조교**